

문서관리번호	2025-S-11
최초 제정일	2025.05.27
최신 개정일	2026.09.09
문서 관리자	공급망지속경영팀

현대자동차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정책

2026.09

목차

1. 총칙	3
가. 선언 및 목적	3
나. 적용 범위	3
다. 관련 정책	3
2. 일반 원칙	4
가. 실사 체계 구축	4
나. 이해관계자 참여	5
3.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원칙	5
가. 사회적 책임	5
나. 환경적 책임	7
다. 윤리적 책임	9
4. 공급망 ESG 실사 프로세스	10
가. 리스크 진단	10
나. 서면평가	11
다. 현장실사	11
라. 개선조치	11
마. 모니터링	12
5. 거버넌스 및 역량 강화	13
가. 경영회의체 및 이사회, 경영진의 역할	13
나. 교육 및 지원	13
6. 구매 의사결정과의 통합	13
7. 기록 관리 및 공시	14
가. 문서화 및 내부 보고	14
나. 대외 공시	14
8. 고충 처리	14
가. 고충 접수 및 처리	14
나. 대표 고충 처리 채널	15
다. 피해자 구제	15

1. 총칙

가. 선언 및 목적

현대자동차는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정책을 제정한다. 현대자동차는 당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 협력사(이하 “협력사”)의 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령(부패, 경제제재, 강제노동, 안전·보건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엄격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인권·노동, 안전·보건 분야에서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SO 20400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ESG 리스크를 식별, 평가, 예방, 완화, 모니터링, 공시하는 책임 있는 실사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가이드라인,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본 정책은 경영진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한다.

나. 적용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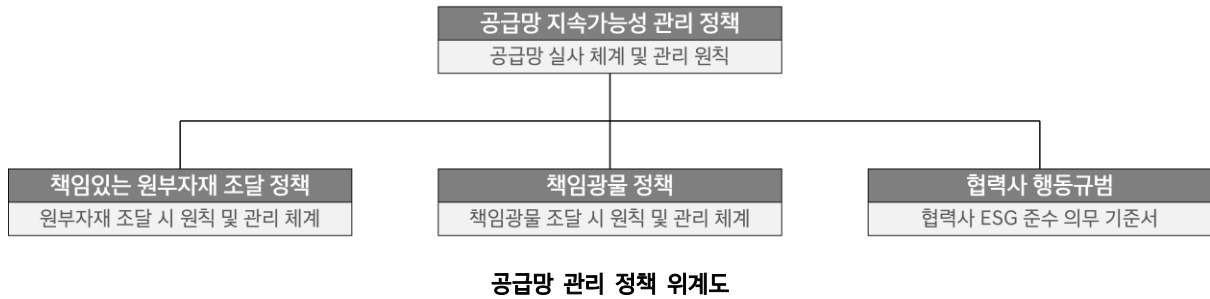
본 정책은 현대자동차 국내외 사업장(본사, 지역본부, 판매법인 및 생산법인, 서비스센터 및 출고센터) 및 자회사와 현대자동차의 사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차량의 설계부터 생산, 유통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참여하는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를 대상으로 한다.

본 정책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해당 국가의 법규와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본 정책은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EU CSDDD,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ILO Core Conventions)」, 「OECD 실사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UN 글로벌 콤팩트 10 대 원칙(UNGC, UN Global Compact)」,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K-ESG 가이드라인」 등 주요 법규·규제 및 글로벌 기준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다. 관련 정책

본 정책은 「책임있는 원부자재 조달 정책(Responsible Raw Material Sourcing Policy)」, 「책임광물 정책(Responsible Minerals Policy)」, 「협력사 행동규범(Supplier Code of Conduct)」의 상위 준거 정책으로서, 각 하위 정책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정책을 준용한다.



현대자동차는 임직원, 자회사,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모든 개인, 조직 및 이해관계자가 본 정책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실사를 통해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이행하며,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공급망 내 부정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완화·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당부한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가 다음을 포함한 당사의 정책을 계약상 의무로써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 i. 「협력사 행동규범」
- ii. 「책임광물 정책」
- iii. 「책임있는 원부자재 조달 정책」

2. 일반 원칙

가. 실사 체계 구축

현대자동차는 사회적 책임 및 환경 관련 규제 요건에 따라, 공급망 내에서 사회적 책임 또는 환경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실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한다.

현대자동차는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내부 책임을 수행하며, 모든 실사 활동은 「OECD 실사 가이드라인」, 「UNGPs」 및 관련 국내외 법령을 준거로 하고,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지속가능경영위원회 등) 및 경영회의체를 통한 감독 하에 실행([5-가. 경영회의체 및 이사회, 경영진의 역할])한다.

- i.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리스크 식별·평가, 예방·완화, 시정, 모니터링 및 공개를 포함한 표준 프로세스 정의
- ii. 내부 실행 조직 구성: 실사 전담 부서 지정 및 경영진 감독 하에 운영
- iii. 정기적 리스크 분석: 필요 시 재분석 실시
- iv. 예방·시정 조치 수립 및 이행: 심각도·가능성 기반 우선순위 설정
- v. 자사 및 공급업체 대상의 예방 및 시정 조치 수립
- vi. 이해관계자 참여: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과 소통 채널 확보
- vii. 정보공개: ESG 정보공개 요구사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 이행

나. 이해관계자 참여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 ESG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사, 자회사 및 협력사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존중한다. 이들의 참여를 공급망 실사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하며, 실사 전 과정에서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특히, [3.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원칙]의 [3-가-⑧ 지역사회 및 원주민 권리] 원칙에 따라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활동 과정에서 여성, 원주민, 소수자 및 기타 소외되거나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원재료 추출 및 가공 과정에서 원주민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 인지 동의 (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의 권리를 존중한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 i.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평가
- ii.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정보 수집
- iii.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시정 조치 계획 수립
- iv.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실행

3.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원칙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사회적·환경적·윤리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원칙을 정의한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원칙은 공급망 실사 과정에서 리스크를 식별·예방·완화 관리하기 위한 지표이자 근거로 기능하며,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정될 수 있다. [4. 공급망 ESG 실사 프로세스]에 기반한 공급망 실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원칙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미준수 시의 리스크를 예방한다.

가. 사회적 책임

① 인권 존중 및 중대한 인권 침해 금지

현대자동차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및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다음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 i. 고문,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대
- ii. 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 등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
- iii. 전쟁, 집단학살 등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 비인도적 범죄 행위

② 아동노동 금지

현대자동차는 「ILO 협약 제138호(C138)」 및 「ILO 협약 제182호(C182)」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 i. 만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
- ii.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가혹한 형태의 노동 및 위험 업무 배치

아동노동이 확인될 경우 즉시 업무·고용 중단, 보호 조치 이행, 교육 지원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 조치를 이행한다.

③ 강제노동 금지

현대자동차는 「ILO 협약 제29호(C029)」 및 「ILO 협약 제105호(C105)」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i. 채무 담보 노동
- ii. 현대판 노예제 및 인신매매
- iii. 감금 및 이동의 자유 제한
- iv. 신분증·개인서류의 압류 및 이직의 자유 제한
- v. 국가 주도의 강제노동(State-imposed forced labor)

모든 근로자는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처벌에 대한 우려 및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 강제노동이 확인될 경우 즉시 업무·고용 중단, 보호 조치 이행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 조치를 이행한다.

④ 차별 및 괴롭힘 금지

현대자동차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연령, 결혼 및 가족 형태, 정치적 견해, 사회적 지위 및 기타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금지한다. 채용·배치·승진·교육·보상 등의 전 과정 및 체계에서 모든 근로자는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는다.

⑤ 공정한 근로조건

공급망 내 모든 근로자는 공정한 근로조건하에 근로한다. 법정 근로시간 및 휴일 지급 기준을 준수하고, 각국의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모든 근로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며, 주거·식사·의료 등 필수 생활비를 고려한 생활임금 수준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이 수립 및 이행되어야 한다.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모든 근로 및 고용 조건은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어야 한다.

⑥ 결사의 자유

현대자동차는 본 정책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한다. 각국의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대규모 이동, 정리해고 등 경영 상의 이유로 인력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각국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협의 기간 내에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진행한다.

⑦ 안전·보건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모든 근로자는

다음에 포함한 조치를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

- i. 안전·보건 법률 및 국제 산업 표준에 기반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 ii. 근로자가 근로·생활하는 모든 구역에 대한 잠재적 위험 평가 및 식별
- iii.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및 모니터링
- iv. 산업재해 발생 시의 적절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v.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발생 등의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 vi. 비상 탈출 시설, 적절한 식수 공급 및 위생 환경 유지 등의 안전한 주거 여건 보장

⑧ 지역사회 및 원주민 권리

현대자동차는 「UN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에 따라 공급망 전반에 걸쳐 사업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원주민의 법적·관습적 권리, 문화, 그리고 전통을 존중한다. 지역사회 및 원주민의 권리는 다음에 포함한 조치를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

- i. 여성과 소수집단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권리 보호
- ii. 토지 취득 및 사용, 자원 개발 및 채굴 시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 인지 동의 획득
- iii. 다음에 포함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금지 및 방지
 - 토지 강탈, 불법 강제 퇴거, 재산권 박탈, 문화적·의례적 장소의 파괴
 - 대기·수질·토양 오염, 산림 훼손,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 iv. 지역사회 및 원주민 공동체와의 지속적 소통

⑨ 인권 옹호자 보호

현대자동차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인권 옹호자의 역할을 지지하며, 공급망 전반에서 모든 사업 활동은 인권 옹호자가 위협·협박·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환경적 책임

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관리

현대자동차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준수하여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관리 및 감축한다. 이를 위해 다음에 포함한 조치를 이행한다.

- i. 과학 기반 감축 목표(SBTi) 등 국제 이니셔티브에 부합하는 목표의 수립 및 이행
- ii.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한 측정·모니터링·보고
- iii.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저탄소 기술 도입,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② 대기오염물질 관리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관리하고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다음에 포함한 조치를 이행한다.

- i.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한 측정·모니터링·보고
- ii. 각국 법률상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의 엄격한 준수
- iii. 배출 저감 기술의 도입, 운송 및 물류의 최적화 등의 저감 조치 이행

③ 수자원 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

현대자동차는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다음을 포함한 조치를 이행한다.

- i.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배출의 정확한 측정·모니터링·보고
- ii. 용수 사용 효율화 및 재활용 확대
- iii. 각국 법률상 폐수 배출 및 처리 기준의 엄격한 준수
- iv. 지역사회의 수자원 접근성 보장
- v. 수계 및 해양·해저 생태계 보호

④ 토양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현대자동차는 건강한 토양의 보전과 책임 있는 토지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망 내 사업 활동으로 인한 토양오염, 토양 침식 및 토지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며, 불법적 토지 취득 및 강제 토지 수용을 금지한다.

⑤ 생물다양성 보호

현대자동차는 생물다양성의 보호·복원·증진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포함한 조치를 이행한다.

- i. 사업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 평가
- ii.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최소화
- iii. 「EU 산림전용 방지 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산림벌채 및 황폐화를 유발하는 원부자재의 조달 리스크 관리
- iv.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불법 거래·취급 금지

⑥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대자동차는 폐기물의 책임 있는 관리,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사용·관리·처리 및 순환자원 활용 확대를 통해 공급망 내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포함한 조치를 이행한다.

- i.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사용·재활용 확대
- ii. 유해폐기물 및 화학물질의 운반·저장·취급·사용·처리 전 과정에 걸친 안전 관리
- iii.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등의 관련 국제 기준의 준수

⑦ 환경 리스크 관리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기타 환경 리스크를 책임 있게 관리한다. 소음·진동 수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근 지역사회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환경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 윤리적 책임

① 법률 및 규정 준수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서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본 정책이 규정하는 기준과 관련 법률·규정상 요건이 상이한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위 법률 및 규정은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를 포함한다.

② 반부패 및 투명성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반부패 관련 법률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기준을 유지한다. 다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비윤리적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 절차와 내부 고발자 보호 체계를 운영한다.

- i. 부패, 뇌물의 수수 및 제공
- ii. 자금세탁, 횡령 및 금융 범죄
- iii. 사기, 담합 및 기타 부정행위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실사 및 지속가능성 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활동·거래, 위험, 성과에 대한 정보를 기준에 따라 기록·관리·유지하고, 필요 시 투명하게 공개한다.

③ 이해상충 방지

현대자동차는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포함한 행위를 금지한다.

- i.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 ii.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④ 공정거래 및 경쟁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서 공정거래 및 경쟁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다음을 포함한 행위를 금지한다.

- i. 가격 담합, 공급량 제한, 입찰 담합 및 기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ii.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⑤ 위조부품 유입 방지

현대자동차는 무단 복제 또는 위조된 원자재 및 부품의 제조·사용·유통을 통한 공급망 유입을 금지한다.

⑥ 지적재산권 보호

현대자동차는 자사 및 이해관계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공급망 내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기밀 등 모든 지적재산을 정당한 허가 및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⑦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현대자동차는 자사 및 이해관계자의 기밀 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련 법률 및 국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포함하는 조치를 이행한다.

- i.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에 따른 적법한 처리
- ii. 정보보안 체계 구축 및 보안 침해 방지 조치
- iii.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는 정보의 공개 또는 부당한 이용 금지

⑧ 공급망 투명성 및 책임 있는 조달

현대자동차는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EU 배터리 규정(EUBR, EU Battery Regulation)」, 「EU 산림전용 방지 규정」 등 관련 법률 및 기준에 따라 우선관리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원산지 및 추적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i. 생산 과정에서 인권·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원부자재의 생산·유통·사용
- ii. 원산지 및 원부자재 정보의 허위 표기
- iii. 무장단체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및 이익 제공

4. 공급망 ESG 실사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국내외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2차 협력사 또한 파악하고 있으며, 2차 이상 협력사 중 중점관리 대상 협력사를 선정하여 매년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현대자동차 구매본부는 해당 서면평가 결과 및 리스크 맵핑을 통해 확인한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고위험 협력사를 식별하고, 이들에 대해 현장실사를 수행한다.

또한, ESG 실사 시스템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중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평가, 분석하고,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구조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사 활동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되며, 실사 결과는 경영진의 의견 등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정책과 실행 조치의 유효성과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러한 실사결과를 구매정책에 반영 및 현대자동차의 공급망 ESG 강화 전략 수립에 반영한다.

가. 리스크 진단

공급망 내 잠재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기업차원의 요인, 사업 운영, 국가 및 지리적 요인, 납품 중인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요인, 관련 산업 요인 등을 고려하여 ESG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진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공급망 관련 기관정보 및 미디어 리서치를 활용한다. 식별된 리스크는 윤리, 환경, 인권·노동, 안전·보건 등 각 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서면평가 지표 등

정량·정성 기반의 리스크 평가 체계에 반영한다.

나. 서면평가

협력사 행동규범 및 관계법령에 대한 협력사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업 내역, 기타 거래 문서 또는 정보 및 자료 등을 통해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진단 지표는 윤리, 환경, 인권·노동, 안전·보건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협력사 행동규범」을 기반으로 환경, 인권 및 노동, 안전보건, 공정거래, 공급망 실사 등과 관련된 법규 및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 자동차부품공급망 관련 이니셔티브(Drive Sustainability) 등을 고려해 국내 법·제도 및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평가 지표를 구성해 활용한다.

현대자동차가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는 규정 준수 확인을 위해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및 자료에 한하며, 협력사는 현대자동차에게 그러한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할 시 이러한 준수와 관계없는 기술 또는 가격 정보 및 자료는 제외한 후 제공한다. 현대자동차는 위 요청에 따라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를 관계법령 및 당사 규정 준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협력사 서면평가 결과는 협력사의 규모와 핵심지표 충족여부 등을 감안하여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확인, 현장실사 대상사 선정, 고위험 협력사 구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공급망 운영 전략에 반영한다.

다. 현장실사

현대자동차는 규정 준수 여부를 보다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필요 시 서면평가 후 현장실사 등 감사를 실시한다. 협력사의 소재 국가, 업종, 납입 부품·원부자재, 서면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실사 대상 협력사를 선정한다. 특히, 서면평가 결과 응답내용 및 증빙자료 제출이 미흡하거나, 잠재적 또는 실재적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확인되는 협력사를 현장실사 대상에 우선 포함한다.

현장실사는 ESG 컨설팅 및 진단·실사 전문가 등 제3자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하며, 당사 구매 부문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현대자동차 및 현대자동차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협력사가 현대자동차의 행동규범 및 관계 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시한다.

라. 개선조치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 다양한 ESG 리스크에 대해 동시에 모든 사안을 동등하게 예방·완화·해소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리스크의 심각도(Severity)와 발생 가능성(Likelihood)을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 부여 체계를 운영한다. 서면평가 응답 결과 및 현장실사 등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리스크는, 사전 식별 및 평가 단계에서 확인된 중요 이슈와 공급망 활동 특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대응 역량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가장 중대한 리스크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후 상대적으로 경미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치한다.

특히 사업장, 자회사, 직접 협력사 등에서 중대한 사회적·환경적 리스크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예방 및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예방 및 완화 조치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수립된다:

- i. 부정적 영향의 심각도
- ii. 부정적 영향의 발생 가능성
- iii. 조치 이행을 위한 자원 활용 가능성
- iv. 산업 특성과 거래 관계의 구조적 특성

마. 모니터링

현대자동차는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다. 점검 및 실사 결과는 업체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하지 않을 경우 현대자동차와의 신규 계약 체결 또는 갱신을 중단할 수 있다. 식별된 리스크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중단, 예방,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현대자동차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 예방,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의 이행 실태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현대자동차는 이와 더불어, 우선순위가 된 잠재적 및 실제 부정적 영향을 예방, 제거, 완화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및 시정 조치를 협력사와 함께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예방행동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i.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실행 일정
- ii. 질적 및 양적 성과지표
- iii. 필요한 재정적·비재정적 투자 및 인프라 개선
- iv. 구매 관행, 설계, 유통 등 사업 전략 및 운영계획의 조정

실제로 사회적 또는 환경적 침해가 발생했거나 식별된 경우, 현대자동차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수립·이행하여 해당 영향을 종결하거나 최소화한다. 시정 조치는 영향의 심각도, 공급망 내 발생 주체의 관여 정도 및 현대자동차의 영향력을 고려해 비례적으로 마련되며,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적절한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당사가 그 효과성을 검증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시정 조치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i. 명확한 실행 일정
- ii. 성과 측정을 위한 질적·양적 지표
- iii. 인프라 및 운영 시스템 개선에 대한 투자
- iv. 전략 및 운영 방식의 개선 사항 등

5. 거버넌스 및 역량 강화

가. 경영회의체 및 이사회, 경영진의 역할

- ① [4. 공급망 ESG 실사 프로세스]에 따른 공급망 실사 체계의 운영은 최고이사결정권자 또는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경영회의체 등을 통해 관리·감독한다. 경영회의체의 주요 역할은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정책의 승인, 정책 이행 감독, 공급망 내 주요 리스크 검토, 리스크 대응 방안 심의, 그 밖에 경영회의체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항 등으로 한다.
- ② 현대자동차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지속가능경영위원회 등)는 공급망 관련 법률 및 규제 대응,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링 및 예방 계획 수립, 관련 투자 의사결정 등을 검토 및 심의한다.
- ③ 최고 경영진은 본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이행 상황을 감독·점검하며,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한다.
- ④ 담당 부서(공급망지속경영팀)는 본 정책의 일상적인 운영 및 관리, 실사 프로세스 실행, 공급망과의 소통 및 협력을 담당한다.

나. 교육 및 지원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사의 ESG 관리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ESG 교육, 맞춤형 컨설팅,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산업안전, 정보보안, 지속가능경영 등 주요 정책 및 실천 사례를 협력사와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 소식지를 통해 소통한다.

[현대자동차 동반성장 포털](#)

6. 구매 의사결정과의 통합

현대자동차는 공급망의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해 ESG 기준을 구매정책 전반에 통합하고, 협력사 선정 및 거래 관계에 반영한다. 신규 협력사 선정 시에는 품질, 재무 건전성, 경영역량에 더해 지속가능성, 안전, 보안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계약 체결 여부 및 향후 거래 조건에 반영한다. 기준 점수 미달 시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재평가를 실시하며, 재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기존 협력사 또한 ESG 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ESG 리스크 진단 및 실사, 안전·환경 사고 현황 점검 등을 통해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위험 협력사에 대해서는 구매정책 상 입찰 제한, 거래 정지 등 불이익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협력사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구매계약 체결 시 확인하고, 협력사에 요구되는 ESG 사항과 구매정책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협력사 행동규범과 구매정책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급망 전반에 ESG 기준을 체계적으로 내재화한다.

7. 기록 관리 및 공시

가. 문서화 및 내부 보고

현대자동차는 실사 의무 이행 과정에서 수행한 조치 및 결과에 대한 모든 문서를 관련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며, 문서의 생성 또는 수집일로부터 최소 5년 또는 글로벌 규제 및 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하는 적정 수준 기간 이상으로 보관한다. 공급망 실사 체계의 운영 전반, 자사 사업장·자회사·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리스크 분석 결과 등 주요 내용은 경영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향후 정책 개선과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나. 대외 공시

현대자동차는 관련 법적 기준에 따라 공급망 실사 절차 및 그 결과 전반을 매년 공시한다. 공시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i. 부정적인 영향 식별 및 평가 결과
- ii. 식별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예방·완화 조치
- iii. 이행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8. 고충 처리

가. 고충 접수 및 처리

현대자동차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책임 위반 또는 환경 리스크 등 공급망 관련 고충에 대해 임직원, 협력사, 소비자,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채널을 제공한다.

고충 처리 채널을 통해 고충이 접수될 경우, 다음의 원칙에 따라 고충 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 ① 접수된 고충은 관련 법규, 내부 절차 및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 및 처리한다.
- ② 고충 접수 시 현대자동차 내부 전담 조직이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접수자에게 세부 조사 개시 여부를 회신한다.
- ③ 세부 조사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 ④ 중대한 법규 위반 가능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 또는 기업 명성/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의 심각한 사안은 경영회의체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 ⑤ 고충 접수·조사·처리(구제) 과정에서 고충 접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고충 접수자의 권리는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i. 적절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권리
 - ii. 시정 및 구제 조치에 대해 협의할 권리
 - iii. 접수된 고충에 대한 처리 과정과 예정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⑥ 고충 처리 결과는 최소 5년 또는 글로벌 규제 및 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하는 적정 수준 이상 기간 보관한다.
- ⑦ 정기적으로 고충 처리 프로세스의 효과성을 검토하며, 필요 시 고충 처리 프로세스 운영상의 발견사항을 본 정책에 반영하여 개정한다.

나. 대표 고충 처리 채널

현대자동차의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구성원,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는 대표 신고 채널을 통해 고충을 신고할 수 있다. 고충은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신고 내용은 기밀로 유지된다. 고충 접수자에 대한 보복은 엄격히 금지한다.

대표 신고 채널

- [국내/해외] 공급망지속경영팀 - 고충접수 (상생협력실천센터 → 공급망 지속경영센터 → 고충접수)
(<https://winwin23.hyundai.com>)
- [국내] 구매기획팀 - 투명구매신고센터 (동반성장 문화정착 → 동반성장 문화 조성 → 투명구매신고센터 바로가기) (<http://winwin.hyundai.com/coportal/system/clean.html>)
- [국내/해외] 감사기획팀 - 사이버 감사실 (<https://audit.hyundai.com>)

다. 피해자 구제

고충 접수·처리 결과에 따라 현대자동차 또는 공급망 내 협력사가 인권·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이행한다. 구제 조치는 공식적 사과, 피해 원상 회복 및 회복 지원, 재정적·비재정적 보상, 관계 당국의 조사·제재 절차 협조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실질적이고 공정한 조치를 포함한다. 현대자동차는 효과적인 구제 조치의 이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수준으로 소통 및 협의한다.